

오피니언

光日春秋

김열규



'서울 올라가서 부산 내려 온다' '대구 서 서울로 올라 간다'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지역주민들이 적지 않다. 올라가긴 도대체 어디로 올라 간단 말인가? 내려오긴 도대체 어디로 내려온다는 걸까? 서울이 어디 하늘 꼭 대기에 붙어 있고 부산이나 대구 등의 고장이 어디 땅바닥에 내려 박혀 있다면 몰라도, 그런 말 이제는 쓰면 안 된다. 그것도 멀쩡한 지역 주민이 그런 뚱뚱한 말을 입버릇으로 달고 다니다니, 알다 가도 모를 일이다. 아니 모르다가도 또 모를 일이다.

일반적으로 '위아래'란 말은 단순히 방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그것은 신분이며 처지의 높낮이를 의미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무슨 물건일 때는, 그 가치며 값을 따져서 상품(上品)과 하품(下品)으로 차별지을 때도 쓸 수 있는 말이다. 심지어 좋고 나쁜 것, 제대로 된 것과 엉터리인 것의 구별도 상하로 나누어서 매길 수 있다.

위자리와 아랫자리, 웃어른과 아랫것, 손위와 손아래, 윗분과 낮은 것..

사람 가지고도 이같이 위아래를 따지고 높낮이를 구별한 것은 그렇다 쳐도, 그게 지역 간에까지 설치고 나선 것은 이젠 웅

납할 수 없다.

조선왕조는 세계사 전체를 보아도 아주 별난, 아주 강한 중앙집권의 체제를 지니고 있었다. 오죽하면,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고 했겠는가? 거기 담긴 교묘한 지역차별이 '서울 올라

서울을 올라간다니?

간다'를 관용어로 굳어지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악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나부대고 있다. 조선조 이래의 남아빠진 시대에는 예사로를 '상향(上向)하고 하향(下向)한다'고들 말했던 것은 사실이다. 제 고향 가는 걸 하행(下行)이라니 말도 아니다. 이제부터 당당하게 '상향(上向)'한다고들 말해야 한다.

요즘에도 여전히, 이 따위 말을 남들에게서 예사로 듣게 될 적마다 필자는 결코 떠올려서는 안 될 걸 문득 떠올리곤 한다.

그 흉악한 일제 식민지 시절에는 서울에서 대구나 부산으로 가는 기차 길은 상행선이라 하고 부산서 서울로 가는 철길은 하행선이라고 했다. 저들은 저들의 수도권 일본의 동경으로 하여금 중앙에 자

라하게 하고 또 최상층에 버티고 있게 하였고 때문이다.

물론 그 때가 차라리 낫다고 부산이나 대구 사람들이 말하는 안 된다는 것은 말하나 마나다. 이 따위를 지금 새삼스레 연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문득 모르는 새에 떠올리곤 하는 것이 본인으로서 부끄럽고 괴롭다.

못난 필자는 스스로 그 따위 교묘한 것을 연상하게 되지 않게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사람들은 떳떳하게 서울은 내려간다고 하고 제 고향은

올라간다고 말해야 한다. 아니면 어느 곳이나 위아래로 매길 것 없이, 그냥 광주 가고 서울 가고 한다고 그렇게만 말하게 되기를 바라고 싶다.

한데 비슷한 보기는 또 있다. 그건 다름 아니고 '너 언제 서울 들어 왔나?' '당신, 언제 광주 내려 갈 거지?' 이런 말이다.

여기서 서울은 안이고 내부다. 지역은 한테고 바깥이다. 그뿐만 아니다. 서울은 중심에 들어가서 자리 잡게 되고 지역은 가장자리나 변두리로 밀려 나서 처져 있게 된다. 이것도 극심하게 남아빠진 중앙 집권제의 퇴폐된 유물이다.

오래 전, 조선왕조 시대라면 '대국 들어가서 조선으로 나온다'고들 말했다. 물론 여기서 대국(大國)은 중국이다. 따라서

조선은 소국(小國)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참괴한 말버릇은 일제시대대로 이어져서 요즘의 대명천지에서도 여전히 서슴대고 있다.

'나 내일 미국 들어가!'라는 말버릇이 바로 그렇다.

'들고 난다'는 말에 담긴 조선조 사람들의 자기비하(自己卑下)나 일제 식민지 시대의 민족 비하나 요즘의 각 지역 사람들의 자기 깎아보리기 하나도 다를 것 없이 창피한 일이다.

올라가고 들어가는 곳이 서울이고 내려가고 나가는 곳이 지역이라면 국토 전체를 두고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그건 다름 아니고 나무 그림이다. 서울이 당당히 중심 근간에 위치하고, 그것도 최상층에 자리하고 지역들은 아랫부분의 끝가지 끝에 달랑 달랑 붙어 있는 그런 나무 모양이 연상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극히 최근의 사회구조나 국가 구조는 흔히 '리좀'이란 말로 표현된다. 그것은 땅위의 나무 모양이 아니고 지하의 뿌리들에 견주어지기도 한다. 거기에 위아래의 구별도 중심 바깥의 차별도 없다.

그러기에 서울 올라가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도 보통 착오가 아니다. 이제 제발 그만두자! 서울 올라간다는 그 말! 모든 지역 사람들이여!

(서경대 명예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첫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된 광주시

광주시가 국내 최초로 비점오염원(빗물로 인한 수질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22일 광주시와 소양호, 도암호, 임하호 등 총 면적 42만 386km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자체가 수질개선 목표를 설정, 이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내년부터 10년 이내에 영산강 광산 지역 수질을 수질환경기준 항목인 BOD 5mg/l 이하로 개선해야 한다.

광주시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된 것은 시를 관통하는 영산강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영산강의 광산지점 BOD는 7.5mg/l 로 기준치인 2배 이상이나 초과하고 있다. 특히 영산강 수질오염원의 75.6%가 빗물로 유입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입자, 농약, 비료, 쓰레기 등 비점오염원이다. 비점오염원을 차단하지 않으면 영산강 수질 개선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비점오염원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농약·비료 사용량, 자동차 등이 급증함에 따라 관리대상이 다양하고 광범위해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다. 특히 도시지역의 초기 빗물은 하수처리장 유입수에 비해 오염도(COD 기준)가 3.5배, 도로 빗물은 12배나 높다.

이 같은 초기강우에 의한 비점오염물질을 하천이나 강으로 유입되면 수질오염은 물론 각종 독성물질이 포함된 경우 물고기 폐사, 조류번식 등 하천의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다행히 광주시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염원 저감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업비의 75% 이상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계기로 각종 오염원의 영산강 유입을 차단할 항구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관리지역의 사업비 국비지원율을 대폭 늘리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령연금' 국고지원비율 상향 조정해야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와 관련,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 보조를 취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는 22일 기초노령연금 비율을 정부가 전액 부담할 것을 촉구했다. 노령연금이 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시행되는 노령연금제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의 60%(약 300만명)에게 월 8만4천원 정도(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는 제도다. 오는 2028년까지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로, 수급자를 628만명으로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된다.

기초노령연금제는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점을 감안하면 시급히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재원의 확보다.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는 기초노령연금제에 따라 지자체가 비용을 30%를 부담하도록 돼 있어 재정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까지 매년 1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남의 자치단체처럼 노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지역은 물론 시지역 자치단체들까지 재정압박을 호소하고 있다. 별도의 재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자치단체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른 복지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다.

재원 확보 없는 노령연금은 시작부터 과잉운영될 것이 뻔하다. 노령연금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노령연금 비용 전액을 부담하지는 못하더라도 국비 지원비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우리는 단일민족, 배달겨레란 말을 흔히 쓴다. 오는 2009년부터 개정될 예정이지만 현재 초·중·고 교과서는 단일민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려서부터 대한민국이 여러 혈통의 자손들이 뒤섞여 사는 여러 국가들과는 달리 민족의 순수성을 성공적으로 유지해 온 자랑스러운 나라임을 교육받아 왔다.

그러나 순수한 단일민족은 상상 속의 존재일 뿐이다. 유라시아 대륙에 접한 한반도와 만주 일대를 근거지로 반만년 역사를 꾸려온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이웃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해왔다. 당연히 다양한 핏줄이 섞일 수밖에

없고 권고했다. 우리 사회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데도 국민의식과 사회제도는 순수 혈통주의라는 편협한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세계화의 수혜국가다. 60~70년대 고도성장을 이룬 데는 값싼 우리 노동력이 세계 각국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토대였다. 이제는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다. 게다가 지난해 농촌에서 탄생한 새 가정의 40%가 국제 결혼일 정도로 급속히 다민족 사회로 변하고 있다.

단일민족은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을 지탱해 온 큰 힘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엔

결맞지 않는 개념이다. 지난해 미시 축구스타 하인스 위드의 방한 이후 흥열 한국인에 대한 각종 대책이 마련됐지만 아직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무리다. 다양성의 장점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한다. 이제 단일민족의 환상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김재철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단일민족



기고



김종남

광주 지역 농·어촌에 거주하는 미혼 남성의 수가 약 6천여 명에 달하고 그중 35세 이상이 전체의 50%에 육박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농어촌 총각들의 아픔과 행복 추구권 문제가 참으로 심각함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인생에 더 없이 중요한 결혼 적령기를 놓치고 결혼을 하지 못한 채 나이 들어가 있는 그들 자신들의 딱한 처지에 말할 것도 없지만 대부분에게 '최인 최인'으로 본의 아닌 불효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곤혹스러움과 부모님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아니다. 국제결혼 가정은 지난 2003년 2만 8468건, 2004년 3만 6934건, 2005년 4만 3815건, 2006년에는 결혼한 100쌍 중 무려 20쌍이 국제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라면 오는 2020년에는 혼혈인이 약 5백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호사다마리는 말이 있다. 요긴하고 좋은 일에도 늘 어려움과 장애에 의해 따를 수 있듯이 최근 국제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시끄러운 잡음들이 생겨나고 있다.

얼마 전 '베트남에서 국제결혼이 불법이다'라는 보도를 접했다. 체제를 달

농촌 총각 국제결혼, 부작용만 들출건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혼기를 훨씬 넘기고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고령의 농어촌 총각들과 도시 근로자들의 36%가 어쩔 수 없이 국제이민 여성들을 맞아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형편이다. 이런 딱하고 급박한 상황속에서 다들스럽게도 최근 해남군, 여수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촌 총각들의 아픔과 딱한 처지에 관심을 갖고 도우려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반갑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03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간 국제결혼은 계속 증가했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 4월말 현재 한국에는 약 1만 7천여명의 베트남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살고 있다.

외교통상부 주호치민영사관 재외 공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 목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비자(F-2)발급 건수는 약 8천 4백여 건에 이른다. 베트남 뿐만

리하고 서로 다른 양국의 법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떠한 일에도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야 하고,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너무나 중요하고 당장 거부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부정적인 면만을 보려하거나 오도하지 말고 보다 밝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국가 사회의 뒷받침이 모색될 그 날을 기대하며 부정적 요소들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현재 이 땅에는 약 4만 여명의 혼혈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할 수만 있다면 전남도가 최근 구상하고 있는 국내 결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보다 큰 관심과 애정으로 이주인 교육과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호남대 교수·천주교 광주대교구 신부>

농병 환자 수영장 출입 스스로 자제해야

스포츠헤터 수영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농병에 걸린 아주머니가 안대를 한 채 들어 왔다.

농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남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영하는 아주머니를 보니 황당했다.

농병은 전염성이 강해 대부분 수영장에서 불결한 상태로 눈을 만졌다가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전염성 강한 질환을 가진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는데도 수영장을 찾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수영장 안전요원에게 다가가 농병을 앓는 아주머니가 나가는게 좋을 듯 하다고 말했는데, 수영장 규정에 그런 사람을 내쫓을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없어서 힘들다고 했다.

똑같이 회비를 내고 수영장에 오는 것인데 자기 맘대로 내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농병 환자라면 스스로 출입을 삼가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

학교의 경우 농병이 확산되면 전교생 등교를 제한할 정도다. 농병에 걸려 수영장을 찾는 것은 다른 시민들의 건강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홍에서·광주시 광산구 두정동



정신과 의사 김국희의 LA통신

최근 3주간의 일정으로 고국을 방문, 시골 여러 지역을 둘러봤다. 그동안 내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관념은 35년전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기회였다.

미국에서 살면서 은연중 우월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지 모른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라는 부끄러움과 고국의 눈부신 발전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됐다.

미국·캐나다·유럽 등 30여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과 단체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너무 우월대 어쩌면 그들에게 거만하게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선진국'이라는 막연

한 자전 풍경에 들어선 전원 주택은 여전히 촌스럽고 어색했다.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의 느낌이라면 적당할 표현일 지 모르겠다.

특히 고작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수백억이 넘게 걸려 만들어진, 감히 인간이 손으로 만들 수도 없는 천혜의 자연을 훼손하는 것,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있는 것을 조화롭게 보존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 미국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반면 시간만 오래 걸린다. 그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다.

보기 싫다고, 필요 없다고, 무조건 없애

개발논리에 멍드는 고국의 자연

한 동경을 갖고 미국이나 유럽 등 외국 여행을 할 목자들이 있다면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세계 최상급 수준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만큼 이번 한국 방문은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고국을 느끼고 체험하는 기회였다.

한국의 관문인 인천 공항은 정말 아름답고 웅장했다. 전국 곳곳으로 뻗은 고속도로와 세련되고 깨끗한 고속도로 휴게소와 화장실 등은 훌륭했다.

'대한민국 만세', '한국인 만세', 자신 있게 외치고 싶을 정도였다.

물론 눈부신 경제 성장, 외형적 발전, 물질적 풍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을 접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연 경관이 파괴해지고 있는 농촌 지역을 둘러보면서 참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주변의 근사

에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은 쉽고 순식간에 가능하다.

하지만 쉬운 길만 찾아서야 되겠는가.

또 도로변에 비친 묘지들은 경쟁적으로 가문의 위세를 과시하는 도구인 듯 보였다.

겨창하고 화려한 무덤은 세를 과시하는 허세에다가 살아있을 때 해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보상해 보려는 표시일까. 자기네들 복 받으려고 '명당자리'라는 미명하에 묘지를 파 해치고는 시신을 이리저리로 옮기는 행위, 나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것 같다.

미국은 아무리 위대했던 사람이었던 보통사람이었던 죽은 뒤의 묘지는 동일하다. 차별 없이 평등장에다가 바다에 뉘여놓은 돌비 이름표 하나다.

'준법정신' 사라진 시위·집회, 환영 못받는다

얼마전 순천시 흙배비 매장에서 분노를 뿌린 사건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

시위 자체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분노를 뿌리는 것은 저급한 수준의 시위 문화다.

얼마전 한 지역 롯데마트가 수입고기를 한우로 속여팔았다고 그 매장 앞에 소 배설물을 투척한 사건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분노까지 시위 도구로 등장했다. 집회와 시위는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개진을 위한 것으로 당연히 보장돼야 할 민주

시민의 권리다.

그 중요한 조건은 바로 '준법 정신'에 근거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시위 현장에서 법을 무시하는 풍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신의 권리와 요구를 주장하고 관철시키겠다고 법마저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 강력히 처벌하고 단속에 나서기에 앞서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들도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이민경·광주시 동구 대동동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浩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시 회 2 부 2200-619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F A X 227-9500>
경 처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F A X 227-9500>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78>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시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